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후 이번이 최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각 시도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친 후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이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었다(부산,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경남)이나 킷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경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도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지하철, 시내버스를 활용한 3대 안전수칙 홍보(대구), 안전보건달력(대전),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음원 및 영상 제작(경남)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도 소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활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실시된 반면,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두며,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된다.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노동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설치비용 70%까지,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 사업은 2022년 발생한 세척공정의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발생 원인이 환기 시설 부재 및 성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노동자 건강 보호에 필수 시설이지만,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많은 사업장에 충분히 보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